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양용모 의원

부의장 이성일 의원... 농산업경제위원장 강용구 의원 · 교육위원장 이해숙 의원

제10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양용모 의원(전주8)이 선출됐다. 도의회는 3일 제35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6.13지선 출마로 공석이 된 의장과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해 의장에 양용모 의원을 선출했다.



양용모 의원

또한 부의장은 이성일 의원(군산4), 농산업경제위원장은 강용구 의원(남원2), 교육위원장은 이해숙 의원(전주5)이 각각 뽑혔다.

양 의장은 "도의회의 존재 이유는 민의를 헤아리고 대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10대 도의회 남은 기간 도정과 교육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물론 도민의 이익과 뜻을 도모하는 일에 충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행부 공직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비난은 이를 감시하는 의회에 쏟아질 수 있는 만큼 각종 주요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해 행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일 부의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회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



"다시 만남시다"

3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북남 예술인들의 현충공연'에 참가한 가수들이 '다시 만남시다'를 부르고 있다.

을 살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짧은 임기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김광수, '국제 필수약품 접근성 강화' 정책토론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제 보건의료 현장의 필수약품 접근성 강화와 공익적 가치 중심의 필수약품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 필수약품 접근성 강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광수 의원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의약품 시장은 이윤 기반의 R&D로 인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의약품 개발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상화를 진단하며 "이로 인해 정부 및 공공분야의 주도적 역할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의약품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정부 및 공공분야의 주도적 역할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도기술 개발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제도 논의를 시작할 때"라며 "오늘 토론회는 국제 보건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을 진단하고, 필수약품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늘 '국제사회 필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각종 각층 전문가들의 소중한 고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의 건강·안전·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보건 의료서비스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허남주 '전북도가 미래천년을 제대로 준비해야'

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사진)은 제 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북도가 미래천년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전북도가 전라도 천년을 맞이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념사업 10개 중의 상당수가 특별전, 특별공연 등 일회성 행사에 그치거나 꼭 천년이 아니어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소년 문화대탐험과 명품여행사업상품 운영의 경우 천년이 아니어도 전라북도가 일상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라며,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사업도 기존에 추진해오던 사업, 지적권신평치유원 조성사업은 2012년 대전공약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 목은 사업을 전라도 천년에 끼워넣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민주, 수도권 3인 경선... 오거돈 등 5명 단수공천

3인 경선 6곳 · 2인 경선 2곳... 7인 출마한 광주 5일째 발표키로... 컷오프 기준 논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3일 오후 6·13 지방선거 공역단체장 후보로 부산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강원 최문순 현 지사 등 5명을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서울·경기·인천 등은 후보자 3명 간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

김민기 민주당 공관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간사에 따르면 이번 심사결과 총 17개 지역 중 단독 후보가 나오는 지역은 5곳, 경선 지역은 10곳(3인 경선 6곳, 2인 경선 2곳)이다.

광주의 경우 일부 후보자들간 단일화 결과를 살펴본 뒤 5일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 간사는 "광주는 후보자들 간에 단일화 결정이 진행되는 대로 공관위에서 경선후보자와 경선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경수의원이 출마한 경남은 향우 김 의원을 전라공천 내지 단수공천 후보로 선정할 계획이다.

부산시장 후보로 오 전 장관이 단수 추천되면서 그와 경쟁했던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컷오프됐다. 강원지사로는 단독 후보로 지원한 최 지사가 낙점됐다.

각각 2인이 지원한 세종시장과 경북지사에는 이춘희 현 세종시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출신인 오중기 예비후보가 단수 추천됐다.

3인이 경쟁했던 울산시장 후보로는 전국민고충처리위원장인 송철호 예비후보가 임동호 현 울산시장위원장과 심규명 변호사를 제치고 단수 추천됐다.

3인 경선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전남, 대구, 대전이다. 해당 지역의 경우 한 후보자가 50% 득표를 넘지 않을 경우, 최다 득표한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할 예

정이다. 서울에서는 박원순 시장·박영선·우상호 의원, 경기에서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전해철 의원·양기대 전 광명시장, 인천에서는 박남춘 의원·김교홍 전 국회 사무총장·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이 경선을 치른다.

전남에서는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신정훈 전 청와대 농업비서관이 경선을 한다.

대구에는 이승천 국회의장 전 정부수석, 이상식 전 총리실 민정실장, 임대운 전 대구 동구청장이, 대전은 박영순 전 청와대 행정관, 이상민 의원,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이 자웅을 겨룬다.

2인 경선은 제주, 충남·충북, 전북이 대상이다.

4명의 예비후보가 신청한 제주에서는 2명이 탈락했다. 제주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우남 전 의원과 문대립 전 문재인 정

부 청와대 비서관이 경선을 벌인다. 충북은 이시종 현 지사와 오제세 의원이 경쟁한다. 충남은 양승조 의원과 복기왕 전 아산시장이 경선을 하고, 전북은 김춘진 전 의원과 송하진 현 전북도지사가 후보로 나선다.

한편 이날 공관위가 발표한 컷오프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공관위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통해 종합 점수에서 20점 이상이 나가거나 여론조사에서 20%p 이상의 지지도 차이가 난 경우 컷오프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일부 후보자의 경우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경선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탈락한 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간사는 예외 기준에 대해 "전체적인 것이 다 고려됐다"며 "선거 관점에서 보면 된다"고만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심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공천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관위는 4일까지 재심 신청을 받은 뒤, 5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이후 경선지역을 대상으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여론조사 50%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뉴시스

한국당, 개헌안에 '대통령 국회해산권' ... 6월 발의

자유한국당은 3일 개헌안에 권력균형을 위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당 개헌안의 주요 골자인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내각제 요소를 일부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개헌안 로드맵을 발표하고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개헌안을 발의하고 9월까지 국민투표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안에서 대통령은 내각과 의회 간 갈등으로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할 시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독단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총리의 제정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국회의 내각 불신임권(내각의 책임을 물어 구성원 전원을 사퇴케 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의원내각제 요소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